

산업체학교

항학열 미끼로 노동력 확보

취업청소년의 '일하며 배우고 싶다'는 항학열을 채워주기 위해 출발했던 산업체 부설학교가 청소년을 '교육을 미끼로 잡아두거나 임금동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크게 어긋나있다.

77년 전국 30개 학교 1만명으로 시작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와 특별학급은 88년 현재 1백76개 학교 12만명(부설 학교 4만7천명, 특별학급 7만3천명)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취업학생들 보다는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찾아서

산업체학교 학생의 80%는 여성 주된 직종은 봉제·섬유·고무 등 임금이 낮으면서도 노동조건이 나빠 노동력 이동이 가장 심한 부문이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중·소업체로서는 졸업원을 학교에 보내줄 경우 최소한 2~3년간은 숙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는 셈이다.

임금도 1년에 1인당 5만원씩만 학비로 부담하면 3년 내내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투자·설치비가 많이 드는 부설 학교의 경우도 교육용 상속재산, 토지, 경비 뿐 아니라 사업소득세, 취득세, 전하세 까지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결코 적자라고 볼 수 없는 편이다.

한편, 일반 중·고교를 야간에 빌어 운영하는 특별학급의 경우, 그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방과 후에 교실을 이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빌려주기를 꺼린다. 그러나 특별학급을 위탁받는 학교가 날로 늘어가는 것(77년 25개, 88년 1백33개)은 1학급당 연간 8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의 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충남예덕실업고등학교 학생 1천5백여 명은 학내 민주화, 임금인상, 현장 민주화 등을 요구조건으로 4일간 파업농성을 했다. 80년 3월에 설립된 충남방직 부설학교생들이 주축이 된 농성에서 이들은 '학교에 보내 준다는 명분 아래 강요된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임금동결, 노조활동엔 제적 협박 교육내용 부실 수업시간 모자라 현장실습 악용, 호경기엔 일시키기도

요구했고, 현장관리자의 학생 장간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85년 구로동맹 파업 때 학생이 많이 참여했던 학교의 경우 시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을 비밀리에 개별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아 공단주변 학교교사들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인천 仁전자 노동조합 교육부장 홍아무개씨는 "산업체 학생이 많은 학교는 파업이나 노조활동이 어렵다. 파업을 하면 학교에서 제적시키겠다는 협박이 들어와 학생들은 졸업전까지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통제'가 곧바로 노동통제로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 산업체학교들의 실정이다.

노동통제와 함께 취업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임금동결이다. 통산 2~3년간의 재학기간에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임

금을 더욱 가중 시키게 된다. (주)세일로에 다니는 김아무개(20)씨의 경우 87년 10월 입사 당시 일당이 3천3백50원, 88년 4월부터 18세 미만자로 처리돼(주민등록 등본상 오기된 경우)일당 2천9백30원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7시간 근무, 1시간 잔업을

국가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는 국민윤리, 체육, 교련 등에는 일반 중·고와 똑같은 시간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국·영·수를 비롯한 여타과목은 일반 중·고의 3분의2만 이수해도 된다고 규정돼 있어 절대수업 시간의 부족으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진도를 다 마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3분의1에 해당되는 시간은 현장실습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악용, 각 업체는 경기호조일 때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고 현장실습으로 처리하는 경우 두 배 이상 교육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실습 평가를 하는 학교의 평가기준은 국가관, 직무기능, 근무자세, 신속정확, 애사관 등으로 돼 있어, 한눈을 팔거나 현장관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성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다니는 기간은 모든 것을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마쳐도 대학에 진학할 정도의 학력은 얻을 수 없다.

취업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졸업장 이외에 사무직으로의 전환이나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며 직장, 학교, 개인생활의 삼중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입학당시의 정원의 50%만이 졸업하는 것을 보아도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는 3년의 세월이 건디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부설학교 설치를 외면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선 노동통제, 임금동결, 노동력 확보 등의 수단으로 노동자를 학교에 보내주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기업의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애 기자>

중졸이하의 전체청소년노동자 52만5천명 가운데 12만여명이 산업체부설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금동결, 노동력확보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당을 1.5배 받게 돼 월급 액수는 큰차이 없지만, 연간 3백%의 보너스 계산에서 그만큼 더 차이가 나 사실상 임금이 더 줄어 들었다. 이밖에 산업체학교는 교과과정도 부실한 편이다.

영동포여고 특별학급의 경우, 영어는 3년간 8단위인데 교련은 12단위나 실시된다.